

# 75만 광주·전남 여성들 목소리 낸다

### “성범죄 무고죄 신설 등 공약, 성평등 정책의 후퇴” 50여개 여성단체, 공약 폐기 촉구 단체행동 예고

75만명의 광주·전남 여성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성범죄 무고죄 신설 공약’ 폐기에 한목소리를 낸다.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15일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를 비롯 50여개의 광주·전남 여성단체가 모여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한다.

20대 대선 이후 여성계에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의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공약

이 폐기되지 않을 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외국에는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없다”는 근거를 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각종 통계에서는 여성의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지난해 성 격차지수에서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대상국가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는 123위, 교육적 성취 104위, 건강과 생존 54위, 정치적 권한 68위였다는 것이다.

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유리천장지수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통계에서도 여성근로자의 월급은 남성근로

자의 67%,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은 19%, 중앙부처 4급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 22.8%, 지자체 5급이상 과장급 중 여성 20.8%로 성별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게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여성의원의 증가와 여성 관련 법률안의 발의 건수 증가가 비례관계에 있음이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즉각 철회 ▲여성고소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는 0.73%가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길 바란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등교 못하니 학원으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 지난해 23조로 1년새 21% 늘어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36만원 광주 43만원·전남 35만원 ‘최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많아지고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더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23조4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에 19조4000억 원이던 것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 2009년 2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그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32만1000원보다 14.2%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총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 일반 교과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8만1000원으로 2019년(23만5000원)보다도 많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74.8%보다도 0.7%포인트 높았다. 2020년에는 67.1%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청소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사교육 참여와 지출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사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서울로 1인당 52만9000원, 가장 적은 곳은 전남(35만1000원)이었다.

전남은 전국 평균(48만5000원)에 비해 13만4000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서울(64만9000원)보다는 28만8000원이 적었다. 광주는 43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 보다 낮았으며 7개 특광역시 중 울산(33만6000원)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5년째 이어온 ‘생명 나눔’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원장 허정) 임직원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덴병원은 25년째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42주년 5·18 기념행사 준비 체제로

### 오늘 기념행사위 출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준비에 나선다.

15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의 문’ 앞에서 출범선언을 한 뒤 국립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의 합동참배로 이어진다.

5·18행사위는 5·18기념행사 전야제에 열리는 시민난장 부스에 참여할 단체 공모도 진행한다.

오는 5월 17일 5·18민중항쟁의 거리 금남로에서 공연, 전시, 체험, 쉼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이 펼쳐진다.

지원 유형으로는 ▲음악,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6개) ▲오월정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다양한 교육 체험 부스 운영(10개) ▲전야제 관람객, 참배객들의 휴식 편의공간인 오월카페(1개) 등이다.

이에 시민난장 부스 운영 또는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가능한 단체·모임을 이번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 확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3월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한달 간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등을 위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 스스로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개선토록 지도해 감독 효과성을 높인 다는게 광주노동청의 계획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불법파견, 차별 시정), 장시간 근로예방 등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전 사업주가 먼저 교육, 자가진단을 활용토록 해 법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 사안에 대해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에는 특히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감독에 앞서 온라인 영상교육을 통해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북구, 구민 권익 신장 노력 결과 보고

### 고충처리위 운영상황 공표

광주시 북구가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읍부조만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1년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운영상황을 알린다. 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 35건을 접수,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각하·기각 및 해당 부서로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제도개선권고 1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11건, 상담 및 안내 6건, 각하·기각 4건, 이첩 3건 등이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